



5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상생 방안 논의

전주매일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음 7월 21일) 제334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정치·경제 원로 “새만금은 죄가 없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10여명, 새만금 예산대책 논의
500만 전북인 단결 호소문 통해 정부 태도 정상화 나서

전북 출신 정치·경제 원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정부의 처사를 지적하며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서울 인근에서 진행된 이날 모임은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덕룡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이강국 전 한법재판소장,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동영 전 대통령후보, 김홍국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권영길 어주경제 회장 등 전북도민회 소속 원로들이 참석했다. <관련사진 3면>

또한 국민의힘 정은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등 전북 여야 의원들과 김관영 도지사가 함께했다.

이처럼 지역 중진 원로들이 전북 현안을 놓고 전면에 나선 것은 바로 책 임정치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 리더로서 구심점 역할을 해온 만큼 상처난 도민들에게 자존심을 세워주고, 막힌 현안에 대해서는 중재와 조정을 통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날도 최근 잼버리로 인해 전북 현안 및 국책사업들의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정치·경제 분야 지역 원로들인 이들은 이번 논란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히며 다양한 원인 진단과 대책을 제시했다.

정동영 전 대통령후보인 이 후보는 “지역 원로들께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며 “무거운 마음이고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잼버리 이후 새만금 예산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된다”며 “여야 합쳐서 그동안 책임이 있는 분들이 모인 만큼 힘을 합쳐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원래 새만금 사업은 국가사업이다”며 “잼버리는 행사에 불과하다. 행정과 정치를 해본 사람으로서 정부에는 실익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 전 총리는 또 “새만금은 전북도민을 위하게 아닌 국가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책 사업 방해는 국회차원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국 전 한법소장은 “잼버리와 새

만금은 이성적으로 분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호소문이 정치나 정쟁 연장으로 가서는 안되고 원로들이 나서서 국민들께 호소해 마음을 풀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김덕룡 이사장은 “잼버리로 인해 새만금이 비하되거나 폄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새만금은 전북 미래이기도 하지만 국가 사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호소문 제시를 통해 500만 전북인 단결과 상처 입은 도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로 했다.

호소문의 주요 골자는 △국회의 제대로 된 정부 예산안 심사 △여당의 새만금 사업 국책사업 명칭 △여당의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연론의 새만금 동북아경제 중심지 도약 협조 등이다.

특히 전북 원로들이 앞장서 잼버리 진실을 전파하고 거짓 선동에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전 도민과 함께 정부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 정상화에 힘을 모아간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 어른들께서 나설 정도로 현재 상황은 위기라고 볼 수 있다”며 “도민들에게 전북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도록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했다. /김재훈 기자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전북지역 6개 교원단체가 도교육청 1층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진상 규명하라”

도내 6개 교원단체, 49재 추모일 맞아 공동 입장 발표
교육활동 보호 위한 대책 마련·조속한 법 개정 촉구
“9월 4일, 교육 공공성 회복되는 ‘회복의 날’ 돼야”

전북지역 6개 교원단체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라”며, 공동 입장문을 냈다.

먼저, 전북중등교사운동 이동진 정책위원장은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앞에, 같은 교단에 서는 동료 교사로서 최후한 마음을 담아 고인과 유가족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로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호소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교육부는 9월 4일 추모 행사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했다”면서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강경대응 방침

에 슬그머니 꼬리 내리는 어처구니없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김종길 대표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매주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자발적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도 이렇다 할 조사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교사들의 울분만 증폭시키고, 국민의 의혹만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전북교총 오준영 정책연구위원장은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신속히 개정하라”며 “이제 더 이상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그 고통과 어려움을 홀로 감당

해내야 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고만으로도 교사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피할 수가 없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교사는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등 부담을 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악성 민원과 학생의 문제행동 발생 시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해 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단지 지휘하는 역할일 뿐 정작 민원 해결에 있어서는 뒷짐만 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민원대응팀 구성에서 학교장의 책임이 좀 더 명확히 제시되고, 교사가 대응팀에 포함되지 않도록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해서도 학교장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교사들은 학생이 문제 행동을 저지할 때 바로 교장실에 전화를 거는 일이라는 것이

다. ▶2면에 계속 /정은성 기자

전북도, 도내 섬 주민 택배비 경감 지원 추진

30일까지... 거주 중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지원금 신청

전북도는 30일까지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19세 이상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택배 이용 시 추가 부담하는 배송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섬 지역의 택배는 생필품을 운송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육지지역에 비해 과한 택배비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섬 지역에 사는 주민이 택배를 이용

할 때 차량 및 화물 도선료로 인해 지역에 따라 육지보다 적게는 3,000원, 많게는 7,000원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택배 물동량을 기준으로 국비 2500만원을 지원받아 섬 주민 택배비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택배 배송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에 본인 인적 사항과 금융기관 정보 등을 기재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30일까지 택배를 이용하면 시·군에서 택배 이용실적을 확인 후 11월 중 신청자 계좌로 택배 1건당 5,000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은 “섬 지역 생활물류 지원사업을 통해 섬 주민의 택배비 부담이 낮아져 섬 주민의 생활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연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라락 축제

2023. 9. 14.(목) - 9. 17.(일) | 4일간

장수군 의암공원 및 누리파크 일원

주최 장수군 | 주관 사)장수한우랑사과라락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전라북도